

#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방안

2020. 4. 9.

사법정책 분과위원회

## <검토 결과 요약>

### 1. 회부된 안건

-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개선 방안 검토

### 2.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 보고

-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(이하 '전자파일')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

- “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”는 점자법 제5조 제3항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와 제26조(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)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
- 정당한 편의제공 및 사법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점자프린트,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의 판결문 제공이 바람직하고 점진적으로 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- 점자판결문 등 제공 방안

- ①안 ⇨ 외부업체나 점자도서관과 변환 위탁 업무 협약 체결 방안

- 장점: 별도 설비 구매나 점역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이 없이도 외부의 숙련인력과 설비를 이용하여 점자·전자파일로 변환해 즉각적인 제공 가능
- 단점: 개인정보보호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위탁업체와 협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, 비밀유지 서약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

● ②안 ⇨ 법원 공무원이 직접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

- 장점: 시각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수 있음.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적음.
- 단점: 점자 프린터 등 설비구매시 예산반영에 시간 소요. 판결문 파일을 그대로 출력 시 오역 가능성이 있어, 점역·교정사 채용 또는 법원 직원에 대한 점역업무 교육이 필요함

● 사법정책분과위원회 검토 결과

- 2가지 방안 중 외부업체를 통해 판결문을 점자·전자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안(1안)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고, 법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(2안)은 1년간 위탁 방안(1안)을 시행한 후 요청건수, 위탁 처리의 질 등을 토대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

■ 점자판결문 외 소송서류 등에 대한 확대 방안

● 협약 체결시 개별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 추가반영 필요

-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들을 수 있는 전자파일, 종이 형태의 점자프린트본, 점자단말기용 전자점자파일, 글자크기확대인쇄본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판결문 제공이 필요함

- 외부업체와 협약체결 시 활용빈도가 높은 전자파일과 점자(전자점자파일 포함)를 표준적인 제공 형식으로 정하되, 글자크기확대인쇄본 등 시각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다른 형식도 요청가능한 형식으로 추가해둘 필요가 있음

● **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한 확대방안: 기일통지서, 그 외 소송서류 등**

- 기일통지서 등과 같이 법원에서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통지하는 전형적인 문서는 판결문에 준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. 외부업체와 협약 체결 시 문서 범위를 “판결문, 기일통지서 기타 법원이 변환을 요청하는 문서”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함
- 점진적으로, 판결문, 기일통지서 외의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. 다만 소송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므로 시각장애인의 실제 수요에 관한 법원 내부 통계분석, 비교법,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(외부용역 발주 포함)가 추가로 필요함



## 1. 관련 규정

### 【점자법】

#### 제3조(정의)

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점자**”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도형·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.
2. “**전자점자**”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.
3. “**시각장애인**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.

#### 제4조(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)

-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이며,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-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·사법·행정·교육·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(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 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】

#### 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
- ① 제3조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·제11호·제19호·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, 제13호·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,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(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행위자 등”이라 한다)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이



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#### **제26조(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)**

-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**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**

#### **제17조(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동 등)**

-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, **점자자료**, 인쇄물음성출력기기, 한국수어 통역, 대독, 음성지원시스템,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·구금시설에서 계구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,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# **【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】**

#### **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: <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>**

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활동 보조의 문제와 함께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문자 형태의 시각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. (중략) 결국,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정보 접근방식을 이용하는지를 살펴 그에 맞추어 시각적 정보를 **점자**,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전자파일,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바코드 인쇄, 음성자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.

#### **【점자 제공에 관한 기타 공공기관 법률 조항】**

#### **공직선거법 제65조(선거공보)**

-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(선거인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위한 선거공보(이하 "점자형 선거공보"라 한다)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**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·제출하여야** 하되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#### **여권법 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**



- ② 외교부장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## 2. 판결문의 점자·전자파일 제공의 필요성

### ■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정보제공방법 다각화

- 판결문의 점자·전자파일 제공은 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에 충실한 것으로 일반 서면통지 시 느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규범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시각장애인은 정보 취득에 취약하므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. 시각장애인 중 점자가 아닌 전자파일을 음성낭독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 점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판결문 제공도 필요함
-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,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, 시각장애인이 그의 필요에 의해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및 사법신뢰도 제고의 측면에서 점자 판결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
## 3. 판결문 점자·전자파일 제공 방안

### 가. [제1안]: 외부업체나 점자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

#### ■ 장점



#### ● 점자판결문의 즉각적 제공 가능

- 이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도서나 문서를 전자파일이나 점자로 변환하는 업무를 다수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외부업체 또는 점자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즉각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판결문을 점자·전자파일로 제공할 수 있음
- 의뢰 문건 수에 비례하여 요금이 책정되는 관계로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여타 방안에 비해 예산소요가 적음
-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은 신청을 받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중개 업무만을 수행. 공무원이 전자파일·전자점자파일 변환, 점자출력 등의 변환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므로 점역사 등 전문인력 채용이나 점역업무 교육 등의 부담이 없음

#### ■ 단점

##### ● 개인정보보호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서약 등 안전장치 요

- 법원의 판결문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, 외부업체 또는 점자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
- 이에 대비해 협약 시 개인정보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과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계약조항을 따로 추가하고, 전자파일이나 전자점자파일의 경우 접근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수준의 암호화 방안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

#### 나. [제2안]: 법원 공무원 직접 수행방안(점자프린터 등 구매 요)

##### ■ 담당 공무원이 변환작업까지 맡는 방식

- 법원 공무원이 전자파일, 전자점자파일, 점자출력 등의 변환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안
- 법원의 시각장애인 사법접근성에 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임
- 아래와 같이 점자프린터나 그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, 그 사용법을 공무원이 직접 익히고, 점역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임

#### ■ 장점



- 법원이 직접 점자 판결문을 출력·제공할 수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

- 각급 법원별 점자 프린터를 구입하면 지속적으로 판결문 및 재판 관련 서류들을 점자로 제공할 수 있고, 최초 1회 구입비용 이외의 추가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

#### ■ 단점

- 판결문 점역의 오역 가능성이 있음

- 소프트웨어를 통한 점역 후 점역사 또는 교정사(자격증 명칭: 점역교정사)가 교열을 보아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점역사나 교정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자 판결문 제공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

### 다.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

- 2가지 방안 중 외부업체를 통해 판결문을 점자·전자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안(1안)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고, 법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(2안)은 1년간 위탁방안(1안)을 시행한 후 요청건수, 위탁 처리의 질 등을 토대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

## 4. 개별 필요에 맞는 형태의 판결문 제공 필요성

#### 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수집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

- 현재 판결문에 적용되는 음성출력용바코드의 경우 페이지별로 기계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서를 읽는 것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며 원하는 부분을 찾아 듣거나 반복하여 듣기 어려움
- 현재 판결문에 적용되고 있는 음성출력용바코드의 경우 바코드 인쇄 오류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, 매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움
- 시각장애의 정도가 낮거나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점자해독이





불가능한 경우가 많고, 점자보다는 글자크기 확대인쇄나 본인이 익숙한 음성변환 출력 프로그램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

- 따라서 현행 음성출력용바코드, 점자 이외에 글자크기확대인쇄본, 음성변환출력용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사법지원 신청에 따른 형태의 판결문 제공이 필요함. 특히 그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활용되는 전자파일 형식을 점자와 함께 먼저 표준적인 제공형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

## 5. 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한 점진적 확대 필요성

### ■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령에 입각한 사법행정 구현

- “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”는 점자법 제5조 제3항 등에 따라 공공기관인 법원은 이미 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점자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·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, 점자자료, 인쇄물음성출력기기, 한국수어 통역, 대독, 음성지원시스템,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점진적으로 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
  -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소송서류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법원 내부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수, 시각장애인이 요청한 사법지원의 형태 등 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